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65
----------	------

발의연월일 : 2025. 3. 20.

발 의 자 : 김태선·김남근·박홍배  
정준호·이학영·윤종균  
박 정·한민수·김태년  
박해철·맹성규·윤준병  
이용우·김주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한·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받은”을 “통지받은”으로, “15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을 “14일”로, “통보하여야”를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u>15일</u>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 ----- ----- ---- <u>통지받은</u> ----- <u>30일</u> ----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u>30일</u>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u>통보하여야</u> 한다. <단서 신설>	② ----- ----- ----- <u>14일</u> ----- ----- -- <u>통지하여야</u> -----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